



충청남도 폐기물 매립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읽고...

이 덕 성

도청 환경관리과 환경사무관

1. 머리말

우선 환경분야(특히 폐기물)에 심도있는 연구와 배려에 감사 드리면서 열린충남 99년 여름호 지역논단에 게재된 “충청남도 폐기물 매립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논단을 읽고 일부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 있음이 발견되었기에 동논단에 대한 행정측면에서의 입장을 정리하고 추진논리와 현실을 피력하여 오해의 소지를 해소함으로써 도민과 실행부서에서의 일관된 추진의지가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을 밝힌다.

현대 행정에서의 효과적 대처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판단된다. 쓰

레기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획기적 대안이 아직은 없는 상태로 전국가적인 과제인 반면 자치단체의 골치거리로 대두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도는 종량제 시행 4년(95년부터 전면 실시)이 되었지만 종량제 기본취지인 원인자 부담원칙이 봉투가격의 동결과 사용량감소로 청소 재정자립도의 11%선에 머물고 있는가 하면, 위생 매립장 등 처리시설(위생매립, 소각로) 설치가 주민의 집단 반발과 지방재정 열악으로 아직도 비위생 매립에 의존하는 시군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설 확보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수거 운반업무 등이 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관주도로 운

본 논고는 열린충남 99년 여름호(통권 16호) 지역논단에 게재된 「충청남도 폐기물 매립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심문보·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반박 논고입니다.

영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재활용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쓰러지고 있는가 하면 재활용 체계도 미정립된 상태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의 노력이 있다 하여도 아직은 완벽한 재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내실을 거두기 어려운 여건이며 어디를 가든 쓰레기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주민의식 또한 성숙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쓰레기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상론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 가치없는 주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충남발전연구원 심문보 박사께서 기고하신 우리도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내용중 중요한 몇가지 만을 지적하여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니 이해하기 바란다.

2. 광역매립장 설치와 규모의 경제성에 대하여

주장하는 광역매립장은 우리도를 몇 개의 권역으로 묶어 대단위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설치비 절감이나 운영면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인바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안이나 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는 인식을 도외시한 이상론이다.

위생매립장 개념이 정립된 1989년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전국을 33개 권역(우리도 4개 권역 : 천안권, 공주권, 대천권, 서산권)으로 설정 광역매립장을 국가시책으로 3년간 추진하였으나 설치지역을 어디로 하며 규모와 예산분담을 인구로 할 것인가 면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이 없었다. 또 쓰레기 원거리 이송에 대한 비용의 상계방법, 운영방법 등 현격한 의견 차이로 시·군간 합의 도출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없었고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당시는 관선 시장·군수 시절이었는데도 지역상호간에 이기적 분위기와 주민 성향이 다르고 시설입지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 등으로 광역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 현재 민선 제도하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를 해결키 위해 환경부에서 고심 끝에 1992년도부터 시·군별 추진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

광역시설설치를 위하여 우리도는 90년도 상반기부터 아래와 같이 4개권역으로 설정하였다.

구 분	내 용
천안권	천안시, 온양시, 천원군, 아산군
공주권	공주시, 공주군, 논산군, 부여군
대천권	대천시, 보령군, 청양군
서산권	서산시, 서산군, 태안군, 당진군

이 중 우선 천안권만이라도 추진코자 기본계획을 수립, 시장군수협의회(천안시,천원군, 온양시, 아산군)와 건설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권역	규모	계	사업비(백 만 원)		추진기간
			국비	지방비	
천안	198,000 m ²	6,930	3,465	3,465	'91~'93

또한 매립장 후보지 4개소까지 선정(천안 목천, 아산 탕정에 2개소, 아산 배방) 현장조사와 설계용역까지 실시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실무회의와 행정협의회를 수차례 개최, 시군부담액 협정도 체결하였으나 실행에는 참여한 지역간의 대립 등으로 진척되지 못한 사례가 있고 막상 어느 지역에 동시설 설치의 타당성 등을 주지시키려 하였으나 후보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으로 행정력만 낭비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별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도 주민반발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인데 타지역 쓰레기가 반입되는 시설설치는 아예 구상조차도 힘든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성 또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다. 당연히 대규모 시설로 운영될 시 설치비와 운영비는 절감될지언정 권역으로 처리될 경우 원거리 이송경비와 쓰레기 반입에 따른 민원 문제 등은 고려치 않은 발상이라 하겠다.

그런 주장이라면 우리도에서도 4개 권역에 최첨단 대단위 시설을 설치하고 운송레일과

자동 상하차 시설까지 설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시설설치가 용이하다면 사업장 폐기물 매립 시설도 설치하여 도에서 직접 운영하면 도세입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매립장만 제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 확연한데 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라고 알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3. 비위생 매립장 정비에 대하여

비위생 매립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밀조사와 완벽한 정비사업이 요구된다는 이론에 대하여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논리이나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개념과 정비를 기획하게 된 동기, 소요예산의 확보와 집행 단계, 토지주와의 관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 방안 등이 고찰되어야 한다고 본다.

위생매립지(Sanitary Landfill)란 개념이 1986년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사용된 매립시설은 전부 비위생 매립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60년도에서 7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이든 인위적이든 생활주변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차수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 등 위생매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단순매립 된 곳을 비위생매립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이나 우리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176

개소이다.

176개소 중에는 아주 오래되어 안정화가 거의 이루어진 지역도 있고 지금도 침출수나 악취 등이 발생되어 생활 불편이나 지하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위생 매립지 중에는 규모가 대단위로 지방비만으로는 도저히 정비를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임시방편적 정비방안으로도 생활불편이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 관계로 우리도에서 추진하는 정비계획은 적은 예산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오염 확산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음을 주지하고 싶다.

예산만 허용된다면야 완전굴착후 선별처리함이 최선인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예산이 없어 위생매립장 공사도 지연되는 처지에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 또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진대 그것은 무시하고 이상형 주장만을 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본다.

매립지의 복원이나 토지이용 또한 토지 소유주가 대부분 사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며 복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레기의 장소 이동은 또다른 2차 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4. 정책제언에 대하여

비위생매립장을 정밀분석하고 복원을 시행, 광역매립지 설치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원칙적인 논리로는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정밀분석하는데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닌 전문가에게 연구용역비로 많은 돈이 들여야 하고 많은 시간도 소요될 것이며 그 결과물 또한 시행가능한 방안제시가 의심스럽고 완벽한 적용에도 정책결정권자(시장, 군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전제로 볼 때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를 소지가 다분하다.

광역매립시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뜻은 좋으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한번 환기시키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운영, 비위생 매립장을 일제 조사케 한 후 정비방법, 정비 순위 등을 결정년차사업으로 200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나 이것은 도나 시군에서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을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영민중남**